

대통령 개헌안 발의...“동참해야” vs “독선·오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이 야권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독선과 오만이라며 큰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키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개헌논의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야당이 정부주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국회가 그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응수하며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필요성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여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국회 자성 먼저”
야 “제왕적 대통령 발상...정략적 지방선거용”

에서 “국민의 개헌시계는 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시계는 멈춰 있다”며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문제 삼기 전에 국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야당이 각자 안을 내놓고 집중해 논의하면 국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주에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할 일도 하

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또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야권이 개헌논의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야권은 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 발의방침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문 대통령이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 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역지를 부리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주도 개헌을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맹공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핵

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은 정부 개헌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요구하며 대통령 주도 개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배숙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사실상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락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110억대 뇌물수수 등 MB 혐의 20여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안팎에 달한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기간에 이르기까지 이발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뢰 혐의가 얼마나 충분히 소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어떤 혐의를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심이 다.

/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범죄 기네스북감” “선거용 정치보복”

정치권, MB 검찰 소환 놓고 정면 충돌

여야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검찰은 불법과 잘못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 측근을 통해 정치보복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개인 비리’로 선을 그으며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죄를 지었으면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MB처럼 (이 정권에도) 부패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헌,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현안을 6·13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감옥에 수감돼 재판받는 와중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며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부패나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가브리핑

이용주 “반성없는 MB에 국민들 분노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와 관련, “진정 어린 반성이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도라인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횡령·배임·조세포탈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안보불안을 운운하면서 말을 아끼



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출석하는 순간까지도 진술한 반성도 없었다”며

“오히려 정치적 보복으로 위장하려는 경고와 엄포섞인 말투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날날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현안해결 행안부 특교세 27억 확보”

나주·화순의 도로정비와 내진설비 보강, 교량설치 등 주민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이 확보됐다.

손금주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나주와 화순지역 5개 사업에 투입될 27억원의 재난 및 현안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교부금을 확보하면서 ▲국지도 55호선 부체도로 교량설치(10억원) ▲나주주 주변 생태탐방로(4억원) ▲나주 부덕양수장 설치(3억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 내진보강(7억원) ▲이양면 용반1교 설치(3억원) 등 나주·화순에 5



개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손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이 나주·화순 주민들의 안전

을 살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틈틈이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살폈던 것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업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의미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그랜드오픈 기념

아직도 모르세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주문은 물론 **배달설치까지 One-stop 제공!**

LED TV 광주·전남 총판

전국최저가 200대 한정 판매

55인치	⇒	44만원
32인치	⇒	16만원

(배달설치비 별도)

공정직영 기업체, 관공서, 학교, 호텔, 병원, 원룸 개인 구매 환영

광주·전남 가맹점 / 대리점 모집

특정행사

대표 주문번호 **1588-3089**
A/S 062) 365-3600

흑석·하남점 010-3326-5606 월산점 062) 365-3100